

## 아렌트(H. Arendt)의 연방 평의회 체제와 한국 민주주의\*

박 주 원\*\*

이 글은 아렌트 이론의 정치적 의미를 참여 민주주의, 소통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근대적 의회와 정당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녀의 정치철학적 기반과 연결되기 힘든 방향이라 보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녀의 정치이론의 핵심을 연방 평의회 체제에서 처음으로써 새로운 정치체에 대한 그녀의 구상과 원리를 급진 민주주의로 연결시켜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이 검토했던 바는 첫째, 그녀의 정치 이념에 조응하는 정치체로서 평의회 체제의 구상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시작되고 구성될 수 있는가, 둘째, 새로운 시작으로서 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평의회 체제가 어떻게 일상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가, 셋째, 그녀의 평의회 구상은 보통선거권이나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나아가 이 글은 프랑스혁명과 러시아혁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쓰으로써 자유의 공간을 창출하지 못했다는 그녀의 언급이 어떠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그리하여 혁명과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간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사상이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를 사유해보고자 하였다.

주제어 : 아렌트, 연방평의회, 마을평의회, 민주주의, 보통선거권, 대의제, 미국혁명, 프랑스혁명, 정치적 자유, 공적 영역

\* 이 글은 2009년 한나 아렌트학회 정기학술회의에서 발표한 글을 수정보완한 것임.

\*\* 영남대학교

## 1. 서론 : 왜 아렌트가 화두인가? 아렌트 담론의 과잉 그리고 민주주의의 위기

한국 사회에서 아렌트(H. Arendt)는 특히 지난 10년 동안 학문적으로나 실천적으로 주요한 화두가 되어왔다. 마치 1980년대의 ‘마르크스주의’와 ‘사구체 논쟁’과 같이, 그리고 1990년대의 ‘민주주의’와 ‘시민사회 논쟁’과도 같이, 1990년대 말엽 한국 학계에 나타나기 시작하여 2000년을 전후해 본격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아렌트에 대한 학문적 실천적 논의는 하나의 ‘사회정치적 현상’이 되고 있다. 그렇다면 왜 아렌트가 화두인가? 그리고 이러한 담론 지형의 변화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무엇보다도 그것은 1989년 현실 사회주의의 붕괴와 자유주의의 승리 이후 문제의 초점이 더 이상 자본주의 생산양식에 대한 어떠한 논쟁이 될 수 없었다는데 기인한다. 1960년대에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승리와 ‘정치적인 것(the political)’의 쇠퇴에 대해 반론하고자 했던 아렌트의 주제는 ‘사회주의’의 쇠락이라는 역사적 현실 속에서 다시 기억되고 재등장하게 되었다. 자본주의 생산양식과 질서에 대한 고민과 논쟁이 어떠한 의미 있는 정치적 결과를 가져오지 못했다는 반성적 자각은 이제 ‘정치’ 혹은 ‘정치적인 것’으로 시선을 돌리게 했으며, 그것은 다음과 같은 방향에서 전개되었다.

한편으로 그것은 이미 마르크스주의 내부에서 정치이론의 부재로 지적되어 온 지점을 보완하려는 일련의 시도들, 즉 그람시 이후 일련의 국가이론과 정치이론, 시민사회론의 연장선상에서 아렌트의 논의를 결합하려는 시도로 전개되었다. 아마도 그것은 아렌트의 논의를 맑스주의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비교하고 해석해보려는 논의에서 발견될 수 있다(김선욱 2001; 박주원 2001; 2004; 이병천 2006; 채진원 2006;

김영일 2007). 그러나 다른 한편 그것은 더 이상 자본주의 경제에 대한 문제가 비판적 주제가 되지 못한다는 관점에서 수용되었다. 아렌트의 정치 개념을 헌정주의와 연결시키려는 논의에서부터 그녀의 ‘정치’에의 강조를 참여 민주주의와 심의 민주주의라는 자유주의적 관점에서 해석하고 있는 논의들이 바로 이러한 경향을 대표한다고 할 수 있다(김비환 2003; 2007; 정윤석 2000; 홍원표 2007).

또한 1989년 이후 아렌트가 주목되었던 두 번째 까닭은 바로 그러한 자유주의의 승리가 가져온 경제지상주의적 귀결에서 비롯된 바 크다.<sup>1)</sup> 이미 1970년대 말엽부터 시작된 세계적인 규모의 경제위기와 장기적 실업은 1989년 사회주의의 쇠락 이후 적어 사라진 자유주의의 정치를 월계관을 쓴 승리자의 모습으로가 아니라 경쟁과 해고, 전쟁을 통해 그러한 정치를 재생산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귀결시켰다. 1989년 이후 자유주의가 초래한 배금주의적 부자담론과 경쟁지상주의 문화는 이른바 아렌트가 ‘반정치’로 묘사했던 노동동물(animallaborans)의 세계에 다름 아니었다는 점에서, 이를 극복하고자 제안했던 아렌트의 ‘정치’개념은 크게 주목되었던 것이다.

마지막으로, 보다 중요한 아렌트 담론의 기반은 바로 그러한 1989년 이후의 세계를 설명할 철학 이념으로서 자유주의와 사회주의를 넘어 보다 새로운 이념적 틀이 요청되었다는데 있다. 분명 아렌트의 정치사상은 근대의 이념들에 커다란 영향을 받았으면서도 어느 하나의 이념으로 귀속시킬 수 없는 비판적 메시지를 함축하고 있기 때문이다. 1989년 이후 자유주의나 사회주의가 아닌 공화주의에서 한국 사회의 정치적 전망을 찾고자 하는 시도가 출현했던 것은 아렌트 담론의 활

1) 이는 근래 이론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정치의 복원’, ‘정치적인 것의 귀환’이라는 화두와 맥을 같이한다. 샹탈 무페(Chantal Mouffe), 울리히 벡(Ulrich Beck), 자크 랑시에르(Jacques Rancière) 등은 우리 사회에서 정치적 혐의의 절차와 공간이 더 협소해지고 왜소해졌음을 지적하면서 ‘정치’와 ‘정치적인 것’의 중요성을 환기시키고 있다.

성화에 주요한 기반이 되었다고 할 수 있다.<sup>2)</sup>

그렇다면 이러한 아렌트 담론의 유례없는 전개는 우리사회를 설명하고 우리의 현실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게 하는데 얼마만큼 기여했다고 할 수 있는가? 다시 말해 아렌트 철학이론의 수용은 한국사회에서 정치적이었는가? 또한 어떤 의미에서 정치적이었던 것일까? 아마도 2008년 이번 정부를 출현시킨 ‘부자’담론과 ‘성공’담론은 적이 사라진 시대의 승리한 자유주의가 맞이한 위기적 현상의 단적인 표현이었다. 그리하여 이번 정부의 대통령은 ‘나는 정치는 모른다. 경제만 안다. 경제를 잘 해 보겠다’는 언설로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의 국민을 설득할 수 있었다. 이러한 언설은 ‘정치’를 다만 권력투쟁으로 폄하시키거나 혹은 경제적 효율성에 반하는 것으로 이해하는 관점을 함축하고 있다. 그리고 그러한 이해는 아렌트의 정치관과 전적으로 반대된다. 과연 지난 10여 년 동안 아렌트 담론의 활발한 전개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언설에 대응하지 못했던 까닭은 무엇일까? 왜 ‘정치’란 권력투쟁이 아니라 상호 실천을 통해 공적 세계를 재건하는 작업이자 자유의 공간이라고 사람들을 설득해내지 못했던 것일까?

이 글은 그러한 이유가 아렌트의 정치 개념을 다만 참여 민주주의나 혹은 담론 민주주의로 연결시킴으로써 소통의 양적 확대만을 제기할 뿐 한 사회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를 새롭게 구성하고 쇄신할, 혹은 한 사회의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이슈로부터 독립적일 수 있는 정치적 통로를 제안하는데 부족했다고 파악한다. 그렇기에 한국 사

---

2) 아렌트의 근대사회 비판은 고대적 이상이 쇠퇴하여 노동이 체계적으로 실천의 공간을 침범함으로써 공적영역에서 자율성을 박탈하고 이를 왜곡시켰다는 사실에 놓여 있다. 따라서 그녀에게서 박탈된 인간의 본래적이고 타당한 조건을 회복하는 길은 ‘공적세계를 재건하는 작업’, 즉 ‘상호실천을 통한 공공영역의 회복’에 다름 아니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그녀의 사상은 개인이 진정한 인간으로서의 삶을 실현할 수 있는 조건으로서 ‘공적인 것(res publica)’에 의해 의의를 얻는 모든 이론을 포괄하는 광의에서의 ‘공화주의’적 전통에 닿아있다고 할 수 있다.

회에서 제기된 아렌트의 ‘정치’ 담론은 그 철학적 풍부함과 진지함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승리와 세계적 규모의 경제위기로부터 출현한 부자담론, 경쟁지상주의라는 ‘경제’의 과잉에 대응하여<sup>3)</sup> 적절하게 새로운 정치체에 대한 비전과 구체적인 정치원리를 제기하고 논의하는데 성공했다고 보기 힘들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렇듯 아렌트의 정치 개념을 담론 민주주의나 소통 민주주의로 연결시키려는 시도는 1990년대 이후 한 사회의 이행론으로서 민주주의의 논의를 담론(discourse)의 문제로 전환시켰다는데 커다란 특징이 있다. 분명 아렌트에게서 ‘정치’는 개인적 선호의 만족이나 개인들을 단일한 선의 관념으로 통합하려는 수단이 아니라 능동적 시민의식, 즉 정치공동체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문제들에 대한 시민적 참여와 집합적 논의에 근거한 것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정치’란 일종의 교체 불가능한 인간경험, 즉 평등 및 다원성에 바탕한 인간들의 참여구조 내에서만 나타날 수 있는 경험이다. 그러하기에 시민적 참여와 공통의 토의로부터 오는 권력의 공유야말로 회복해야 할 ‘정치’의 본질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만일 그녀에게 ‘시민적 참여’가 의미하는바 기성 정치제도에 참여하는 것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면, 기존의 정치체와 제도를 수용한 바탕아래에서 참여를 독려하는 참여민주주의만으로 그녀의 정치관을 한정 지을 수는 없다.

물론 많은 논자들이 지적하듯이, 아렌트는 자신의 정치 개념을 전개

3) 물론 이와 관련하여 아렌트 사상에서 ‘정치’와 ‘경제’ 혹은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간의 관계를 일종의 자립화된 결과물로 추상화시키거나 단순히 대립된 것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다음과 같은 김선욱의 지적과 같이 이 양자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 “기술적으로 어떤 올바른 척도가 존재하여 이를 기준으로 답을 끌어내는 부분을 아렌트의 용어로 사회적이라고 하며, 이와는 달리 자신을 드러내고 다양성을 드러내는 부분을 정치적이라고 한다. 이렇게 본다면 이 양자는 밀접히 연결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양자는 번쉬타인이 주장하는 것처럼 불가분리적으로 뒤얽혀있는 것이 아니라 양자가 가지고 있는 특성이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에 서로 얽혀있되 분리 가능하며 또 혼돈되어서는 안되는 것이다(김선욱 2001, 237-238).”

하는 가운데 언어의 역할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강조한다. 인간의 복수성(plurality)이 드러나게 되는 것은 말(speech)의 사용을 통해서라고 보기 때문이다. 그러나 만일 인간의 복수성을 드러낼 수 있는 언어의 본질적 기능이 설득과 합의에 놓여 있다 해도, 그 설득과 합의의 과정은 특정한 서로간의 대면의 형식과 공간을 필요로 한다. 어떤 이가 다른 무작위의 사람과 그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방식으로 관련되어 대면하게 된 인간들 상호간에 언어행위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정치와 민주주의의 문제에서 공통의 토의나 담론이 그 자체로 특권화 될 수는 없다.<sup>4)</sup> 정치에서 언어가 가지는 역할에 대해 근본적으로 고민했던 아렌트의 관점은 토의와 담론 그 자체의 중요성을 절대화하여 추상적으로 강조하는 방향에서가 아니라, 어떤 방식으로 토의가 이루어질 수 있는지 토의가 이루어지는 공간의 형식과 구성원리를 모색하는 방향에서 논의가 전개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므로 이 글은 아렌트 이론의 정치적 의미를 참여 민주주의, 소통 민주주의, 심의 민주주의에서 찾으려는 시도는 근대적 의회와 정당의 체제를 넘어서고자 하는 그녀의 정치철학적 기반과 연결되기 힘든 방향이라고 보는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그녀의 정치이론의 핵심을 평의회 체제에서 찾음으로써 새로운 정치체에 대한 그녀의 구상과 원리

<sup>4)</sup> 20세기 현대정치사상에서 제기되었던 언어적 전환(linguistic turn)이 가지는 의미와 한계에 대해서는 (박주원 2009, 43-45) 참조. 이 글은 하버마스과 아렌트의 언어정치와 크리스테바의 언어정치의 의미를 구분하여 해석한다. 즉 언어의 문제를 언어 안에 내포되어 있는 결코 합치될 수 없는 기호계와 상징계의 경계를 인식하고 그에 대해 ‘반항’하는 것으로 읽고 있는 크리스테바의 언어정치의 방향과 ‘합의’를 목적으로 하는 하버마스 류의 언어정치의 방향은 정 반대의 의미를 가진다고 해석한다. 크리스테바에게 언어의 실천성은 언어가 의미를 재현하고 생성하는 상징의 질서이자 권력이라는 점을 단순히 확정하는데 놓여있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언어의 의미화과정 내부에 억압과 동시에 그것을 거부하고자 하는 충동, 반항의 심리와 신체가 내포되어 있다는 점을 제안한데 있기 때문이다. 바로 이 점이야말로 그녀의 언어이론이 소쉬르와 라캉과 구분되는 지점이자 다른 자유주의 담론 철학이나 소통이론과 구분되는 정치적 지점이라는 것이다.

를 급진적 민주주의로 연결시켜보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이를 위해 이 글이 검토하고자 했던 바는 첫째, 그녀의 정치 이념에 조용하는 정치체로서 평의회 체제의 구상은 어떠한 조건 속에서 시작되고 구성될 수 있는가, 둘째, 새로운 시작으로서 혁명과정에서 나타나는 평의회 체제가 어떻게 일상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가, 셋째, 그녀의 평의회 구상은 보통선거권이나 대표성의 원리에 대해 어떠한 입장을 가지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나아가 이 글은 프랑스혁명과 러시아 혁명이 사회적 문제 해결에 힘씀으로써 자유의 공간을 창출하지 못했다든 그녀의 언급이 어떠한 의미로 파악될 수 있는지, 그리하여 혁명과 민주주의의 문제와 관련하여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간의 관계에 대한 그녀의 사상은 어떠한 의미와 한계를 가지는지를 사유해보고자 한다.

## 2. 민주화 이후 한국 민주주의 논의와 아렌트

한국 사회에서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논의는 이전의 민주주의론과 비교해 볼 때 대체로 다음과 같은 점을 중심으로 변화되어 전개되었다.<sup>5)</sup> 그 첫째는, 물론 모든 논의가 그러한 것은 아니지만, 많은 논의

5) 이 글에서는 최근 나타나고 있는 일련의 새로운 민주주의논의인 생태 민주주의, 직접 민주주의, 직접행동 민주주의, 풀뿌리 민주주의, 생산자 민주주의는 검토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이와 같이 대의제 민주주의를 넘어서고자 하는 새로운 민주주의의 경향들의 특징과 전개에 대해서는 또 다른 독자적인 지면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만 이 글 또한 최근의 정치적 지형이 민주주의 담론의 새로운 적대를 만들어내고 있으며 새로운 의미를 형성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시작된 것임을 밝혀둔다. 1987년 이후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론’이 가졌던 비관적 전망은 ‘적이 사라진 시대’적 현실에 바탕하고 있었다. 즉 누구나 민주주의를 이야기하므로 아무도 그 말의 의미 있는 효과를 가질 수 없는, 민주주의 담론으로는 어떤 실질적인 사회정치적 갈등을 담아낼 수 없는 공허한 것이었다. 그러나 최근의 일련의 새로운 정치적 행위들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일정한 전선을 형성해가고 그에 따라 민주주의 담론이 하나의 현

들이 ‘민주주의의 자유주의로의 길’을 표방하고 나섰다는 점이다. 한국사회의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자유주의를 수용하거나 혹은 더욱 풍부한 것으로 발전시켜야 한다는 논의의 근거는 다음과 같이 표명된다. 이러한 논의의 전환을 시도한 대표적인 논자로서 최장집은 그 까닭을 ‘자유주의와 민주주의가 언제나 상호보완적이지는 않더라도 자유주의의 기반 없이는 민주주의는 발전하기 어렵기’ 때문으로 설명하고 있다(최장집 2001, 1-3).

그러나 최장집은 민주주의를 풍부하게 할, 그리고 그것이 근거해야 할 이념으로 자유주의를 제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로크적 내용에서 찾는 것이 아니라 동시대의 상이한 지류였던 ‘공화주의’에서 찾고 있다. 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모델. 이는 그가 정통적 입장의 자유주의적 내용과 거리를 둬으로써, 이전까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왔던 자유주의에 비판적 입장을 유지할 수 있고,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유주의적 범주에 속하는 그러한 방식을 택했음을 의미한다. 그는 공화주의가 표방했던 ‘시민적 휴머니즘(civic humanism)’ 혹은 ‘사회 전체의 공공성(publicity)’, 그리고 ‘시민적 덕성(civic virtue)’을 중심으로 하여, 그간에 로크를 계보로 함으로써 계승할 수밖에 없었던 개인적 ‘권리’ 위주의 자유주의를 넘어 보다 자유주의의 범위를 확장하고자 하는 일정한 시도를 전개한다. 그리고 기존의 자유주의와는 거리를 두면서 동시에 민주주의의 자유주의로의 길을 택하는 그의 선택은 그의 저술에서 ‘자유민주주의’가 아닌 ‘자유-민주주의’라는 새로운 조어로 표상된다.<sup>6)</sup>

그러나 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길은 대체 무엇인가? 공화정은 역사적으로 고전기 로마 시기에서부터 16세기 이탈리아 피렌체, 베네치아

---

실적인 것으로, 그리하여 정치적인 담론이 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sup>6)</sup> 이러한 관점을 명시적으로 표명하기 시작한 책으로는 최장집(2001)과 (2002) 참조.

의 공화정, 17-8세기 해링턴, 몽테스키외, 루소에게 나타났던 공화주의 이념, 19세기 프랑스 혁명과 미국 혁명에서 나타났던 공화주의 이념에 이르기까지 공화정이라는 정치체와 그에 대한 관념은 동일한 것이 아니었다. 다음 장에서 검토될 것이지만, 아렌트가 넓은 의미의 공화주의 전통에서 있다고 했을 때 그러한 언명은 하나의 결론적 대답이 아니라 질문의 출발이다. 아렌트에게 공화주의의 핵심은 무엇으로 파악되는지 그리고 그러한 공화주의의 현실적 정치체로서의 원리는 무엇인지의 문제는 대답되어야 할 질문이기 때문이다. 다만 여기서 지적되어야 할 것은 한국 민주주의의 공화주의적 길을 제안했던 대표적 논자로서 최장집의 논의에서 그것은 ‘시민적 휴머니즘’이나 ‘공공성’, ‘시민적 덕성’으로 논의되었으며 그러한 경향이 일정한 영향력을 가지고 한국 민주주의 논의에 수용되고 확대 되었다는 점이다.<sup>7)</sup>

한편, 민주화 이후 민주주의 논의의 두 번째 특징은 대부분의 논의들이, 민주주의를 추동할 주체와 방식에 있어서 그 논의들 간에 가지는 커다란 차이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를 형식/내용, 절차/실질, 혹은 정치적/경제적 민주주의로 구분하고 이제는 전자의 민주주의에서 후자의 민주주의로 발전해가야 한다는 민주주의의 이원론적 함축과 단계론적 이행론을 전개했다는 점이다.<sup>8)</sup> 최근의 민주주의 논의에서도

7) 과연 한국 사회의 역사 정치적 조건에서 공화주의의 핵심적 내용을 어떻게 제기하고 구성해 가야하는지의 문제와는 별개로, 그 동안 민주주의론을 전개해오면서 지속적으로 정당정치의 활성화를 주장하며 제도정치가 가지는 중요성을 역설해왔던 최장집은 공화주의의 핵심을 권력 간의 견제와 균형이라는 제도적 측면에서 찾은 것이 아니라 공적 정신, 시민적 덕성, 시민적 인문주의라는 의식, 문화, 정신에서 찾고 있다.

8) 한국 민주주의론의 대표적 논의라고 할 수 있는 다음의 책들에서 논자들은 민주주의를 바라보는 그들의 이념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87년 민주화 이후 한국사회에서 민주주의는 ‘정치적 민주주의(혹은 형식적 민주주의)’에서 나아가 이제는 ‘경제사회적 민주주의(혹은 사회경제적 독점의 해체, 또는 실질적 민주주의)’에 주력해야 한다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동일하다(최장집 1996; 김세균 1997; 손호철 1999). 이와 달리, 전자에서 후자로의 이행이 아니라 민주주의의 최소 정의인 전자를 완성된 민주주의로 파악하는 입력백도 민주주의를 이원적으로 구분하여 바라본다는 점

‘민주주의의 질’이라는 관점에서 민주화 20년의 한국 민주주의를 평가하면서 아직은 부족한 정치적 민주주의, 악화되는 경제적 민주주의, 민주화의 이중적 효과로서의 사회문화적 민주주의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최근의 한국 민주주의를 ‘기로에 선 민주주의’로 개념화하는 논의(김정훈 2007) 또한 그 연장선상에 서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은 마치 현재의 민주주의는 전자의 절차적, 정치적, 형식적 민주주의를 성취한 것으로 파악함으로써, 여전히 존재하는 정치적 제도와 절차의 문제를 간과하게 만든다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관점이 가지는 더욱 근본적인 문제점은 민주주의의 문제를 형식과 내용, 절차와 실질으로 이원화된 것으로 바라보게 함으로써, 이들 간의 실질적인 관계를 간과하게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원적이고 단계론적인 사고 속에서 민주주의의 문제는 ‘정치적 영역’과 ‘사회경제적 영역’간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분리시키는 방향으로 이끌어지게 되었던 것이다.

물론 90년대를 풍미했던 이와 같은 관점에 대해 반성적 사고가 제출되지 않은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최장집은 이렇게 민주주의를 이원론적으로 구분하고 전자에서 후자로의 민주주의 이행론으로 파악하는 단계론적 관점이 갖는 문제점에 대해 지적한 바 있다.<sup>9)</sup> 그러나 그가 이를 문제 삼은 것은 이렇게 이원적으로 추상화시켜 대립적으로 파악하는 관점으로는 마치 87년 민주화를 통해 전자의 민주주의, 즉

---

에서는 위의 관점과 맥을 같이 한다(임혁백 1994).

<sup>9)</sup> 최장집은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논의를 첫째, 민주주의의 핵심을 최소주의적 절차의 실현으로 보며, 그리하여 민주화이후 한국의 민주주의는 일련의 민주적 절차들이 제도화되고 실천됨으로써 민주주의가 완성되었다는 논의, 둘째, 절차적 민주주의와 실질적 민주주의는 상호 구분 될 수 있는 실체가 있는 개념으로 보며, 그러므로 경제적 민주화로 전진할 것을 요청하는 논의, 셋째, 한국은 아직 절차적 민주주의도 완성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의 실현이 더 중요하다는 논의로 구분하고 있다(최장집 2007, 83-85).

절차적 민주주의가 이루어졌다고 잘못 바라보게 될 뿐 아니라, 실질적 민주주의가 절차적 민주주의와 대립된 것으로 오해되어 마치 제도화 될 수 없는 가치나 목표로만 상정된다는데 놓여 있었다. 그리하여 그에게서 한국 사회가 당면한 민주주의의 과제는 다만 여전히 부족한 절차적 민주주의의 심화와, 또한 실질적 민주주의를 하나의 제도적 실천의 측면에서, 정확히는 정당에 의해 산출될 수 있는 정책적 실천으로 제안되었다(최장집 2007, 86; 97-100).

과연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은 어떤 관련을 갖는 것인가? 바로 이러한 문제에 깊이 천착했던 논자 중 하나는 아렌트였다.<sup>10)</sup> 미국 혁명과 프랑스 혁명, 러시아 혁명에 대한 분석을 통해 평의회 체제를 새로운 정치체(political body)로 제안하고 있는 아렌트의 논의는 비록 그 스스로 ‘민주주의’라는 개념을 쓰지 않았지만 최근의 한국 민주주의론이 봉착해 있는 문제의 지점, 즉 민주주의에서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 간의 새로운 관계의 지점을 어떻게 놓아야 하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이다. 즉 ‘평의회 체제’를 중심으로 아렌트의 정치사상을 바라보려는 이 글은 한편으로 한국 사회에서 아렌트를 해석하는 주된 정치적 방향에 대한 하나의 비판이자 동시에, 아렌트의 평의회 체제를 통해 기존의 한국 민주주의 담론 지형에 간

<sup>10)</sup> 이 문제와 관련하여 그에 대비되는 논자는 바로 그녀보다 한 세기 전의 마르크스였다. 실제로 아렌트의 정치사상은 마르크스에게 깊은 영향과 더불어 그에 대한(보다 엄밀하게는 마르크스에 대한 당대의 해석으로서의 맑스주의에 대한) 비판적 천착 속에서 크게 영향 받았다고 할 수 있다. 1953년 쓰여졌던 초고인 “칼 마르크스와 서양 정치사상의 전통”이외에도 『인간의 조건』과 『전체주의의 기원』 등의 저작은 그녀가 준비했던 미완의 유작과 더불어 마르크스가 대면했던 문제를 깊이 의식하고 쓰여진 사유의 흔적들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아렌트와 마르크스간의 관련에 대한 문제는 아렌트 사상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매우 핵심적인 고리라고 할 수 있다. 그러한 만큼 이와 관련한 주제는 단순히 그들의 결론적 귀결만을 단순히 대비하거나 비교하는 차원을 넘어서, 아렌트의 텍스트들에서 보여지는 마르크스 이해의 변화에 대한 문제, 그녀가 해석했던 마르크스의 정치관이 과연 마르크스의 텍스트에 대한 올바른 해석이라고 할 수 있는지의 문제 등 보다 면밀히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접적으로 문제제기하려는 하나의 시도이다.

### 3. 아렌트의 연방 평의회 체제 : 마을 평의회의 구상과 지속 조건

아렌트의 정치 이념에 조응하는 정치체제로서 연방 평의회 체제의 구상은 무엇이었는가? 즉 그것이 구성되는 원리는 무엇이며, 그것은 어떻게 일상화되고 지속될 수 있는가, 혹은 어떤 조건에서 지속될 수 없는가? 앞서 설명되었듯이, 아렌트는 공적 영역에 대한 그녀의 관심 속에서 사람들을 대의체제나 정당이 아니라 연방 ‘평의회’를 통해 서로를 관련시킬 제도의 가능성을 제안했다. 그녀에게 주권(sovereignty)을 전제로 한 정치적 대표체로서 정당은 자발적 정치체이며 사회적 문제해결에 종속되지 않는 평의회 체제와 근본적으로 구분된다.

아렌트에게 ‘평의회체제’는 역사적인 혁명의 실천 경로 속에서 발현된 맹아로서 사람들이 자신의 공적문제에 대해 토의하고 실천을 취할 수 있는 공적공간을 의미한다. 그녀는 평의회 체제의 역사적 형태로서 1789년 이후 그리고 1870-1871년 혁명기의 파리, 1905년과 1917년 혁명기 러시아, 1918-1919년 베를린과 뮌헨과, 1956년의 헝가리 혁명에서 나타났던 혁명평의회, 소비에트나 인민민주주의를 지적하고 있다 (Arendt 2004, 252).

혁명 시기 자발적으로 발생한 정치체로서, 그녀는 미국혁명에서 ‘새로운 시작’과 ‘자유’의 현시를 본다.<sup>11)</sup> “새로움에 대한 이 파토스(pathos)가 현존하는 곳에서만이 그리고 새로움이 자유의 이념과 결합

---

<sup>11)</sup> 그러므로 그녀에게 혁명이란 새로운 시작을 창설하는 인간적 능력이다(Canovan 1992, 214).

되어 있는 곳에서만이 혁명에 대해 말할 수 있다(Arendt 2004, 26-27). 그녀에 따르면 미국혁명에서 사람들은 권력을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권력을 구축할 것인가를, 또한 정부를 어떻게 제한할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새로운 정부를 창설할 것인가를 중요한 문제로 여겼다(Arendt 2004, 146). 혁명 과정에서 그들은 주(state) 권력을 제한하고 폐지하는 대신 새로운 중심으로서 연방권력을 세우는데 초점을 모았기 때문이다.<sup>12)</sup>

이와 관련하여 흥원표는 쉘(Jonathan Schell)의 이론적 논의를 바탕으로 그녀에게 정치에서 새로운 것의 시작 능력은 ‘건국’에서 가장 명료하게 드러난다고 해석한다(흥원표 2007, 90-91). 물론 미국 혁명에서 사람들은 이미 존재하는 타운 권력체들의 전통을 인정한 가운데 주(state)라는 새로운 권력의 중심을 구축하고 연방공화국을 창설한다. 그러나 그녀의 정치 개념에서 주권 개념이 다만 주권자적 개인을 의미하는 것이라면,<sup>13)</sup> 새로운 시작으로서 혁명의 행위는 건국이 아니라 새로운 정치체의 형성을 뜻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더욱이 그녀가 미국혁명을 프랑스 혁명과 근본적으로 구분할 수 있었던 근거가 타운들의 수평적 연대를 기반으로 한 주 권력의 구성과 주 권력의 수평적 연대를 기초로 연방권력을 구성했던 그 정치 원리에 있었다면, 그것은 중앙집중적인 주권 국가의 정치 원리와는 근본적으로 구분되는 것이기 때문이다.<sup>14)</sup>

<sup>12)</sup> 이러한 맥락에서 프랑스혁명은 공적 정치활동이 아니라 행정적 수단으로서만 충족될 수 있는 물질적 필요를 요구할 정치적 기회를 빈민들에게 열어준 급진적 국면이었다고 비판된다. 혁명가들의 공화적 에토스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다시 행정체제로 전화되었다는 것이다. 반면 미국혁명은 다른 모든 혁명과 달리 특히 사회적 문제가 공적인 정치무대로 폭발되지 않았고, 입헌적 권리가 보호하는 분할된 사적영역의 제도화가 완전히 성공적이었다는 것이다.

<sup>13)</sup> 그녀에게 주권자는 오직 말과 행위를 통해 논의에 참여하는 개인이다. 따라서 그녀에게 정치적 문제는 국가나 정당의 문제가 아니라 의견(opinion)의 문제이며, 이것의 타당성은 오직 토론과 합의에 기초한다(Sitton 1987).

여기서 중요한 것은 그녀가 제시했던 평의회의 사례들이 공장에서의 노동자평의회(worker's council)는 아니었다는 점이다. 오히려 미국 혁명기에 대한 그녀의 언급에서 나타나는 공화국의 이상적 정치원리로 볼 때, 본래 그들의 정치활동의 원천이었던 ‘마을지역(township)’에 기초한 ‘구(wards)’를 근거로 하는 지역구 체제의 평의회였다고 해석할 수 있다(Arendt 2004, 234-242). 그녀는 그러한 평의회의 구성과 관련하여, 하층평의회의 대표들에 의해 상층평의회가 구성되며, 그들은 하층평의회에 구속되지 않는다고 논의한다(Arendt 2004, 278). 즉 지역평의회 내부의 권위는 어떠한 형태의 책임과 의무의 압력에도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평의회 내부의 각 평의회들의 관계는 ‘오직 신뢰에 기초를 둔’ 평등한 것이다.<sup>15)</sup>

그러나 이러한 자발적 정치체였던 평의회들이 지속될 수 없었던 조건 혹은 까닭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사회적 빈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공적 자유의 공간으로서 평의회의 자발성은 쇠퇴하였다는 점으로 지적된다. 프랑스 혁명에 대한 그녀의 비판은 바로 이러한 맥락에서 수행되었다.<sup>16)</sup> ‘대중이 빈궁으로 허덕이고 있는 곳에서는 어떠한 혁명도, 그리하여 새로운 정치체의 창설도 불가능하다(Arendt 2004, 224)’는 것이다. 불행으로부터의 구제를 요구하는 피할 수 없는 대중에 의한 압력 때문에, 프랑스 혁명가들은 전제정으로부터 자유에를 추

14) 그러나 미국에서 혁명기의 이러한 원리는 지속되지 못했다.

15) 주 정부의 헌법을 기초했던 지방의회나 인민회의의 대표자들은 그 권위를 하부 단위의 마을, 구역으로부터 비롯되었다고 보았다. 그러므로 이러한 하부 단위의 권위를 보존하는 것은 곧 그들 자신의 권위의 원천을 보존하는 것에 다름 아니었다. (Arendt 2004, 164)

16) 이 글에서 면밀하게 검토되지는 못했지만, 이와 관련하여 이병천은 아렌트 사상의 궤적에서 『혁명론』과 『전체주의의 기원』 사이에 두 가지 변화를 지적한다. 그 하나는 『기원』에서 프랑스 혁명에 대한 평가가 한층 더 부정적인 쪽으로 변화되었으며, 다른 한 가지 변화는 마르크스에 대한 평가 또한 한층 더 부정적인 쪽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이병천 2006, 410).

구하는 대신 가난으로부터의 구제를 추구했다는 것이다.

이로부터 그녀에게 새로운 정치체로서의 평의회 체제는 사회적 빈곤의 문제, 사회적 문제의 해결로부터 독립적인 정치체여야 한다는 점, 사적 관심의 이해관계의 충족을 위한 도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 추론된다.<sup>17)</sup> 비록 거의 언급되지 않았지만 아렌트의 주요한 적대자는 헤겔이었다. 그녀의 이러한 비판은 특히 사적 영역과 공적 영역 사이를 매개해 주는 그리고 가족과 정치적 삶을 매개해 주는 것으로서의 ‘사회’개념에 집중되어 있다. 아렌트의 ‘사회적인 것(the social)’의 개념과 헤겔의 ‘시민사회(bürgerliche Gesellschaft)’는 모두 공적인 것과 사적인 것의 상호침투로서 이해하고 있다. 그녀가 볼 때 헤겔의 결사체, 조합, 경찰과 같은 제도들은 공적 영역과 사적 영역사이의 구분을 안정시키고 조절하는 것이라기보다는 오히려 그것들 간의 명확한 경계를 해소하고 각각의 자율성과 본래의 순수한 모습을 위협하는 것이다.

아렌트에 의하면 진정한 의견에 반대되는 이익은 대규모집단에 관련될 때만이 정치적으로 관련되어지는데, 이러한 이익대변은 대표자를 제약하거나 의견의 진정한 교환, 형성을 방해한다. 이는 특히 현대의 정당체계에 전형적인 현상이며 복지국가는 다수의 이익을 반영한다는 점에서 과도적이다. 매개적인 사회적-정치체를 통해 사적영역과 공적영역을 중재하려는 헤겔적 시도는 그러므로 국가구조 내에서 공적자유의 공간을 축소시킨다는 것이다. 그렇기에 아렌트는 헤겔과 달리 근대사회와 고대적 공화주의의 종합을 모색하지 않고 근대성, 특히 근대국가(관료제)와 근대사회(대중사회)에 대항하는 것으로서 고대적 정치사회의 모델인 *politike koinonia*, 즉 *oikos* 혹은 사적 영역과 분명히 구분되는 모델을 방어하였던 것이다. 그녀는 이러한 맥락에서 단지 역

---

17) 그녀에게 ‘사회적인 것(the social)’이란 사적 이익의 행동과 제도들을 공적 역할로 가장하는 영역이다.

압으로부터 자유로워지려는 해방(liberation)에 대한 욕망과 정치적 양식의 삶으로서 자유(freedom)에 대한 욕망을 구분한다.<sup>18)</sup> 이러한 맥락에서 그녀는 이와 마찬가지로 건국 초기의 미국 혁명이 가졌던 미덕이 쇠퇴하게 된 원천은 미국인들이 자신들의 정치체의 진정한 기원이 자유의 영역을 창설하려는 노력에서 비롯된 것임을 기억하지 못한데 있다고 비판했던 것이다.

평의회가 지속될 수 없었던 두 번째 이유는 기성 정당의 경쟁과 탄압에서 찾아진다. 그러한 점에서 혁명 정당도 마찬가지였다. 오히려 러시아에서 소비에트를 탄압했던 것은 볼셰비키 정당이었으며, 프랑스크혁명에서도 자코뱅 당의 국민의회(National Assembly)였다고 비판한다(Arendt 2004, 246-249). 그러나 실제로 그녀가 지지했던 평의회들은 사실상 모두 사회주의 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했던 것이라는 점에서 그것을 반드시 노동자평의회와 구분되는 순수한 마을평의회로 파악하는 그녀의 해석은 잘못된 것이다. 주요한 문제는 오히려 혁명의 과정에서 발생한 노동자평의회를 이후 와해시키거나 변질되게 만든 원인은 무엇인지, 그리고 혁명의 시기 동안 발생했던 노동자평의회를 정당이 아닌 자발적이고 일상적인 정치체제로 지속시킬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지와 관련되어 있다. 그러나 그녀는 지역에 기반 한 평의회 체제를 처음부터 혁명적 노동자평의회와 구분시킴으로써, 현실에서 평의회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을 왜곡하여 해석했을 뿐만 아니라 현실에서 평의회 정치를 구축해 갈 수 있는 전화의 조건을 탐구하는 데로 나아가지 못했다는 한계를 갖는다(박주원 2004, 233).

---

<sup>18)</sup> 다음의 문구는 그녀의 이러한 개념적 구분을 단적으로 드러내준다. “해방과 자유가 같지 않다는 것은 자명하다. 해방이 자유의 조건이라고 해서 그것이 자동적으로 자유를 가져다주는 것은 아니다. 더욱이 해방liberation 속에 함축된 ‘자유liberty’의 개념은 소극적일 뿐이다. 따라서 해방의 욕망이 자유에의 욕망과 동일시될 수는 없다(Arendt 2004, 22).”

진정한 공화국 혹은 새로운 정치체로서의 평의회체제가 사회적인 것의 해결로부터 무관하거나 독립적인 원리로 구성되고 영위되어야 한다는 조건은 아렌트의 혁명이론에서 ‘사회적인 것’과 ‘정치적인 것’ 간의 관련문제를 제기한다. 주지하듯이, 그에 대한 비판적 언급에도 불구하고, 아렌트는 서구 정치적 사고의 전통에 있어서 마르크스를 최후의 위대한 사상가로 간주했다. 근본적으로 ‘세계와 무관한(worldless)’ 관조와 철학으로부터 인간의 활동적 삶에 대한 중요성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그녀는 철학을 ‘실현’하라는 마르크스의 요구를 심각하게 받아들였다. 그럼에도 그녀는 생산활동의 필연성으로부터 자유에로 고양되리라는 마르크스의 가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히 마르크스가 인간의 노동활동을 중심에 두었다는 점에서 비판했다기보다는 인간에게 필연성의 영역은 이해관계라는 서로의 관계를 넘어서 자유로운 공동의 공간을 창출할 수 없다는데 그 근본적 비판이 놓여 있었다.<sup>19)</sup>

아렌트의 견해에서 볼 때 공적영역은 자연적 능력에 있어서는 불평등하지만 정치적으로는 평등하게 구성된 개인들의 복수성(plurality)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녀에 따르면 isonomia(법앞에 평등한)로서의 polis의 의미는 시민체(citizen body) 내에서 지배받는 자와 지배하는 자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무지배(no rule)’를 의미한다. 이에 따라 진정한 ‘의견의 다수성’을 견지하고 자유로이 교환하는 시민들 간의 강압적이지 않은 발언들이라는 상호실천의 공적 모델을 확립시

<sup>19)</sup> 아렌트에 따르면, ‘노동력은 결코 소진될 수 없으므로, 만일 그것이 삶의 고된 일로 소비되지 않는다면 자동적으로 다른 더 높은 활동을 촉진시킬 것이라 가정하는 기계론 철학의 환상(Arendt 1996, 133)’을 포용함으로써 노동동물의 승리라는, 무자비하고 무제한적인 소비사회의 팽창으로 귀결되고 말 뿐이며 이는 아이러니하게도 단지 소비사회의 눈부신 풍요로움에 의해 숨겨질 뿐 공동의 세계를 결여할 것이라 비판적으로 전망했다.

키고, 공공성의 원칙에 반대되는 것으로서 사적생활과 가계(oikos)에 관련된 이익, 필요, 관심들을 공동의 의사결정에 도입한다는 관념을 강력히 거부했던 것이다.

그러나 사회적인 것과 무관한 정치적 행위만이 자유로운 행위라는 언명, 즉 정치 그 자체를 위한 정치라는 그녀의 개념은 스스로 ‘진리와 정치’에서 언급했던 바와 모순되거나 상처되는 것이 아닌가? 이에 대한 아렌트의 논리는 그녀의 사상 전체에서 일관되지 못한 측면을 가진다. 즉 인식의 차원에서는 객관적인 진리의 기준을 부정했던 그녀가 활동의 차원에서는 모든 사적인 활동을 초월하는 그 자체 목적으로서의 행위를 설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나아가 도구적 관심이나 사적인 관심이 침투하지 않은, 다시 말해 그 자체로서만 의미를 갖는 순수한 공적 관심이나 행위란 과연 가능한 것일까?<sup>20)</sup> 거꾸로 만일 상호 관계 속에서 이야기된 것, 설득된 것이 정당하다면 왜 행위는 도구적 활동으로서의 노동, 작업과 구분되어야 하는가? 또한 만일 구분된다면 그녀는 이해관계와 관계적, 맥락적 담론을 초월하여 존재하는 또 다른 목적으로서의 언어행위, 목적으로서의 행위를 가정하는 것이 되어버리며, 만일 구분되지 않는다면 왜 노동, 작업과는 구분되는 행위 개념이 가능한지의 근거가 사라지게 된다고 생각된다.

#### 4. 결론: 아렌트 사상에서 혁명과 민주주의의 문제

앞서 검토하였듯이, 아렌트에게서 평의회 체제를 구성하는 새로운

---

<sup>20)</sup> 이와 관련한 비판으로는 Jay(1978)와 Pitkin(1981) 참조.

창설의 역사적 행위는 대부분 혁명기의 사례에서 인용되었었다. 그러나 혁명이란 과연 하나의 지속적인 제도나 체제가 될 수 있는가, 그리하여 일정한 민주주의 체제라고 불리어질 수 있는가의 문제가 제기된다. 엄밀히 말해서 그녀에게 민주주의 개념은 존재하지 않는다. 민주주의 또한 하나의 지배체제 혹은 통치체제를 의미하는 것이기에 그녀의 정치개념이나 권력 개념과는 상치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코헨은 제도화나 입헌행위에 기초한 모델 혹은 입헌화 된 권력을 안정화시키는 어려움을 그녀의 정치이론의 내적 한계로 지적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아렌트 자신도 일상적인 제도에 혁명적 정신을 구현시키려는 기획의 어려움이나 내재적 자기모순을 의식하고 있었다. 그녀는 어떠한 영구혁명의 정치를 부인했는데, 이는 궁극적으로 독재적 대립물을 발생시키기 때문에 그러했다. 그러나 그렇다면 어떻게 혁명정신이 구현될 수 있는가? 혁명의 목표는 새로운 정치 공간의 창출이며, 이는 권력을 제한하기 보다는 확립하는 것이어야 한다. 사실상 아렌트도 이러한 제도화의 차원을 권력행사보다는 법의 지배에 연결시키고 있다. 그러나 우리의 실정법이 헌법 그 자체에 기초를 두고 있다면 헌법에 안정성을 부여할 법의 원천은 무엇인가? 헌법제정 그 자체에 내재하는 악순환을 어떻게 극복한 것인가? 제헌의회의 합법성의 원천은 무엇이며 그것이 정당하다면 제헌의회의 자기해산은 무엇으로 정당화되는가? 아렌트는 헌법들의 상위에 존재하는 18세기의 절대적 자연법 이론은 오늘날 이러한 문제에 대답을 제공하지 못한다고 코헨은 지적하고 있다. 결국 그녀는 법의 원천과 권력의 원천을 구분하는데 많은 어려움을 안게 되었고 특히 극도의 입헌불안정성으로 귀결되는 딜레마를 안게 되었다는 것이다.<sup>21)</sup>

---

<sup>21)</sup> Cohen & Arato(1991)의 Chap. 4 참조. 그 밖에 Cohen(1996) 참조

또 한편 평의회 체제에 대한 그녀의 구상을 민주주의의 문제와 연결시켜 생각하려 할 때 부딪치는 문제는 보통선거권에 대한 문제이다. 시튼(J. Sitton)은 아렌트에게서 보통선거의 원리 부정된다고 본다. “이러한 (평의회) 대표성의 체계 아래서는 오늘날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적용되고 있는 보통선거제도는 필요하지 않게 된다.”는 것이다(Sitton 1987, 88). 그녀에게 정치적 자유란 오직 ‘통치에 참여하는 당사자가 되는 권리 이외에 어떤 것도 의미하지 않(Arendt 2004, 218)’는다. 아렌트(H. Arendt)에 따르면, “대중사회에서 인간이 견디기 힘든 이유는 사람들의 수적 크기 때문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 존재하는 세계가 그들을 결집시키고 관계 맺어주며 또한 서로를 분리시켜주는 힘을 상실했기 때문이다(Arendt 1996, 52-53).” 그러므로 개인과 세계 전체와의 의미 있는 관계를 창출하지 못한다. 대의제 정치의 행위인 개별적 투표 행위는 투표자들 간에 아무런 관련을 맺어주지 못하며, 따라서 정치적 공간을 형성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서로간의 토의와 설득이 배제된 채 이루어지는 선거의 결과, 위임된 자와 위임한 자의 관계는 아무런 상호신뢰에 기초하지 않은, 그러므로 절대적인 지배와 통제의 권력으로 자립화하며 따라서 도구적 권력으로 귀결되었던 것이다. 그녀에게서 관료제와 전체주의는 자유의 공간을 상실한 근대 정치의 필연적인 귀결이었다. 근대적 대의 체제에서 정치는 단순한 ‘관리’나 ‘행정’으로 타락한다는 그녀의 지적은 바로 이러한 점에서 비롯된 결과이다(Arendt 2004, 239-240). ‘정치(the political)’는 상실되고 ‘사회적인 것(the social)’만이 그 공간을 채움으로써, 정치는 다만 사회와 경제의 관리로서만 나타났던 것이다.

아렌트에게 근대 대의제 체제는 사회적 영역의 부상과 정치적 영역의 침식이라는 역사적 맥락에서 현상한 것으로서, 자신의 공적행위를 투영할 수 없는, 그리하여 인간 실존의 근본적 조건인 ‘정치’의 상실과

‘자유’의 부재로 비판되었다. 따라서 그녀에게 대안적 정치체제의 방향은 사회적 관심으로부터 급진적으로 단절된 공적 공간의 회복에 놓여졌다. 어쩌면 아렌트의 급진적 단절 전략은 근대 자본주의 사회가 형성시킨 사회적 갈등을 차단시키려는, 그리하여 일정한 자유의 공간을 보호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되었는지도 모른다. 하지만 인간이 자신의 사적이고 사회적인 삶으로부터 출발하지 않는 관계란 비역사적이며 그것과 직접 관련되지 않는 독자적인 공적 공간이란 자신이 잘 알지도 친숙하지도 못한 그리고 통제할 수도 없는 추상적인 공간이 아닐까(박주원 2004, 242)? 그녀가 혁명론을 통해 제안한 타운십에 기초한 마을평의회 또한 역사에서 처음부터 그 자체로 공적인 목적으로 분리되어 있는 공간은 아니다. 그 또한 마을의 삶 속에서 구성되어지는 공간이며, 따라서 자립적인 공간이 아니다. 그러므로 아렌트를 통해 민주주의의 문제를 돌아볼 때 새로운 민주주의의 구성이나 새로운 정치의 구성은 참여의 확대나 공적 공간의 확대에 핵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상실된 공적 공간을 재구성할 수 있는 또 다른 정치적 형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비록 그 구체적인 모습은 제안할 수 없지만, 그것이 단순한 참여의 양적 확대와는 구분되며 사적인 것으로 기형화되어 버린 기존 제도의 단순한 개선과 구분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녀에게 핵심은 자립화된 공적공간이 아니라 기존의 공간을 공공화할 수 있는 새로운 정치적 형식과 정신이기 때문이다.

(2010년 9월 22일 접수, 2010년 11월 18일 게재)

참고문헌

- 구자광. 2008. “도래할 민주주의: 지적 vs. 데리다.” 『라캉과 현대정신분석』. 10(2).
- 김비환. 2007. “아렌트의 ‘정치적’ 현정주의.” 『한국정치학회보』. 41(2).
- 김비환. 2003. “아렌트의 정치사상에서 정치와 법의 관계: 민주공화주의체제에  
서의 법의 본질을 중심으로.” 『법철학연구』. 6(2).
- 김선욱. 2001. “하나 아렌트의 정치 개념 - 정치적인 것과 사회적인 것의 관계를  
중심으로.” 『철학』. 67.
- 김선철. 2007. “한국 민주화 다시 보기 -과정으로서의 민주주의.” 『창작과비평』. 137.
- 김세균. 1997. 『한국민주주의와 노동자·민중정치』. 현장에서 미래를.
- 김영일. 2007. “권력현상에서 생활현상으로: ‘정치’에 대한 란다우어(G. Landauer)  
와 아렌트(H. Arendt)의 이해와 현대적 의미.” 『한국정치학회보』. 41(1).
- 김정훈. 2007. “민주화 20년의 한국 사회-기रो에 선 한국 민주주의.” 『경제와사  
회』. 74.
- 박주원. 2004. “하나 아렌트와 칼 마르크스의 대의제 민주주의 비판.” 『철학과  
현실』. 61.
- 박주원. 2001. “마르크스의 사상에서 ‘생산’과 ‘정치’ 개념 -아렌트와 하버마스  
의 마르크스 비판에 대한 검토를 중심으로.” 『한국정치학회보』. 35(3).
- 박주원. 2009. “언어와 정치-줄리아 크리스테바의 사상을 중심으로.” 『21세기  
정치학회보』. 19(2).
- 박혁. 2010. “의지의 정치에서 의견의 정치로: 아렌트의 루소비판.” 『한국정치사  
상학회 월례발표문』.
- 박혁. 2009. “정치현상으로서의 자유-하나 아렌트(Hannah Arendt)의 ‘정치적 자  
유’ 개념.” 『사회와 철학』. 18.
- 브루스 커밍스. 1996. “비교론적 시각에서 본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창작과  
비평』. 92.

- 빛나는 전망. 2003. “평의회 운동의 역사와 현재적 의미.” 『지구화시대 맑스의 현재성 2』. 서울: 문화과학사.
- 서규환. 1993. “‘시민사회와 민주주의’에 관한 최근 논쟁.” 『이론』. 5.
- 서유경. 2000. “한나 아렌트의 정치 행위(action) 개념 분석.” 『정치사상연구』. 3.
- 손호철. 1999. 『신자유주의시대의 한국정치』. 푸른숲.
- 윤상철. 2007. “어떤 민주주의를 어떻게 이룰 것인가?” 『경제와사회』. 76.
- 이병천. 2006. “마르크스의 모순, 아렌트의 모순.” 『문학과 사회』. 19(4).
- 임혁백. 1994. 『시장, 국가, 민주주의: 한국민주화와 정치경제이론』. 서울: 나남.
- 정원교. 2009. “공화주의적 경제 민주주의의 전망.” 『사회와 철학』. 17.
- 정운석. 2000. “아렌트의 근대비판과 새로운 정치의 모색 - 근대적 정치기획을 넘어서 공화주의에로.” 『철학사상』. 11.
- 정재만. 1992. “안토니오 그람시와 공장평의회운동.” 『성대사림』. 8.
- 조희연. 2009. “‘민주주의의 외부’와 급진민주주의 전략: ‘민주주의의 사회화’를 위한 새로운 연대성의 정치학을 향하여.” 『경제와 사회』. 82.
- 주성수, 정상호 편저. 2006. 『민주주의 대 민주주의』. 아르케.
- 채진원. 2006. “1871년 파리코뮌과 시민사회 -아렌트와 마르크스의 논의를 중심으로.” 『시민과 세계』. 8.
- 최장집. 2008.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인가』. 생각의 나무.
- 최장집. 1996. 『한국민주주의의 조건과 전망』. 다남.
- 최장집. 2007. “한국 민주주의, 무엇이 문제이고 무엇이 문제가 아닌가.” 『어떤 민주주의인가』. 후마니타스.
- 최장집. 2001. “한국 민주주의와 시민적 휴머니즘.” 『한국민주주의특강 논문』. 아세아문제연구소. 2001. 8. 22.
- 최장집. 2002.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 후마니타스.
- 홍원표. 2007. “한나 아렌트의 ‘새로운 시작’ 개념과 그 변형.” 『정치사상연구』. 13(1).
- 홍원표. “소양 조용은과 한나 아렌트의 혁명이론: 동·서양의 차이를 넘어서.” 『21세기정치학회보』. 15(2).

- Amiel, Anne. 2002(1999). "Arendt, Marx et le mouvement ouvrier." *Actuel Marx*.  
 25. (백영현 역, "아렌트, 마르크스 그리고 노동운동." 『시민과 세계』. 창간호).
- Arendt, Hannah. 1996(1958). *The Human Condition*. Chicago: Chicago Univ. Press.  
 (이진우 외 역. 『인간의 조건』~한길사).
- Arendt, Hannah. 2005(1961). *Between Past and Future*. New York: Viking Press. 서유경 역. 『과거와 미래사이』. 푸른숲.
- Arendt, Hannah. 2004(1963). *On Revolution*. New York: Viking Press. (홍원표 역. 『혁명론』~한길사)
- Arendt, Hannah. 1979(1972). *Crises of the Republic*, New York; Harcourt Brace & Company. (김동식 역. 『공화국의 위기』~두레)
- Assheuer, Thomas. & Perger, Werner A. 2005. 『세계화 이후의 민주주의』. (이승협 역. 평사리)
- Bauman, Zygmunt. 김동택 역. 1998. 『지구화, 야누스의 두 얼굴』. 한길사.
- Beck, Ulrich. 2000. 『적이 사라진 민주주의』. 정일준 역. 새물결.
- Canovan, Margaret. 1978. "The Contradiction of Hannah Arendt's Political Thought." *Political Theory*. 6(1).
- Canovan, Margaret. 1992. *Hannah Arendt: A Reinterpretation of Her Political Thought*, Cambridge: Cambridge Univ. Press.
- Cohen, Jean & Arato. A. 1991. *Civil Society and Political Theory*. MIT Press.
- Cohen, Jean. 1996. "Rights, Citizenship and the Modern Form of the Social: Dilemmas of Arendtian Republicanism." *Constellations*. 3(2).
- d'Entreves, Maurizio. 1989. "Agency, Identity and Culture: Hannah Arendt's Conception of Citizenship." *Praxis International*. 9(1/2).
- Hansen, Philip. 2007. *Hannah Arendt : Politics, History and Citizenship*. (김인순 역. 『하나 아렌트의 정치이론과 정치철학』~잡우사)
- Hill, Melvyn A. (ed.) 1979. *Hannah Arendt: The Recovery of the Public World*. New York: St. Martin's Press.

- Hindhman, Lewis P. & Sandra. (ed.) 1994. *Hannah Arendt: Critical Essays*. SUNY Press.
- Jay, Martin. 1978. "Hannah Arendt: Opposing Views." *Partisan Review*. 45(1).
- Kateb, George. 1987. "Death and Politics: Hannah Arendt's Reflections on the American Constitution", *Social Research*. 54(3).
- Mouffe, Chantal. 이행 역. 2006. 『민주주의의 역설』. 인간사랑.
- Parekh, Bhikhu. 1981. *Hannah Arendt and the Search for a New Political Philosophy*. Macmillan Press.
- Pitkin, Hannah F. 1998. *The Attack of the Blob: Hannah Arendt's Concept of the Social*. Chicago: Chicago Univ. Press.
- Schwartz, Joseph M. 1989. "Arendt's Politics: The Elusive Search for Substance", *Praxis International*. 9(1/2).
- Sitton, John F. 1987. "Hannah Arendt's Argument for Council Democracy." *Polity*. 20(1).
- Wolin Sheldon. 1983. "Hannah Arendt: Democracy and the Political." *Salmagundi*. 60.

## The System of Federal Council in Arendt and the Question of Democracy in Korea

*Joo-Won Park,*

This thesis tries to find the essence of her political theory in the system of the federal council connecting radical democracy with an idea and principle of new polity. For this purpose, this thesis reveals followings : first, under the what condition, the idea of federal council possibly begins and be constructed, second, how the federal council as a new beginning of revolutionary process could be sustained and become everyday life. third, what's the relation of Arendt's idea of the federal council with principle of the universal suffrage and representation. Through this revelation, this thesis tries to define the meaning and limitation of the Arendt's political thought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ocial' and 'the political' in the question of revolution and democracy.

Key words : Hannah Arendt, federal council, township council, democracy, universal suffrage, representative democracy, the American Revolution, the French Revolution, political freedom, public sphere